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가등급 현황

[평가등급 기준]

득점률	평가등급
100%	S
90% 이상 ~ 100% 미만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50% 이상 ~ 60% 미만	E
50% 미만	F

[평가등급 현황]

1 연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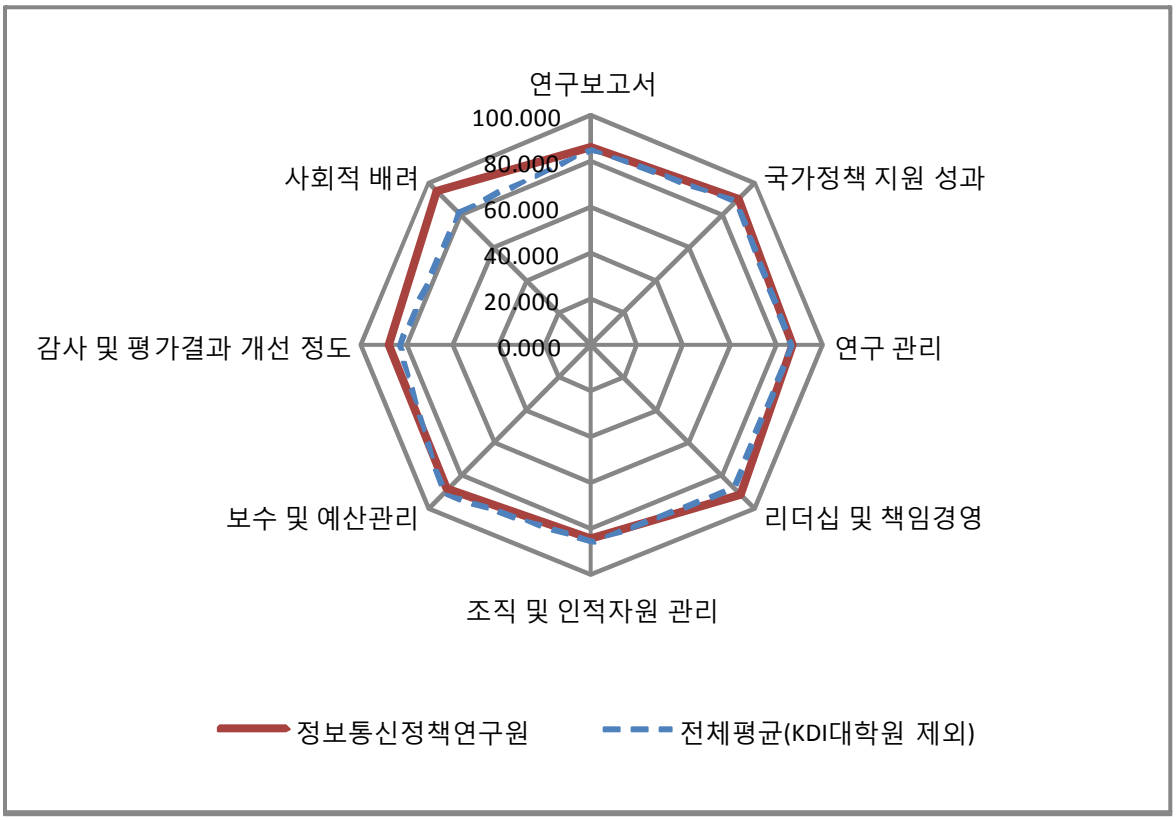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의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B
	1-1-2. 연구보고서의 연구윤리 준수 정도	□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위반 의심 여부	S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 국정과제 수행 연구·사업 실적과 성과	B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A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A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A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1-2-3. 정책 집행사업 지원 성과	□ 정책 집행사업 기여도	-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우수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매우우수
1-3. 연구 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B
		□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C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A
	1-3-3.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A
		□ 정부 3.0 추진 성과 정도	B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C
	1-3-4.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A

2 경영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등급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A
		□ 대내·외적 소통 능력	B
		□ 윤리경영	A
	2-1-2.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B
		□ 책임경영 이행 정도	B
	2-1-3. 자율지표	□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	A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	S
2-2.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C
		□ 조직 구성원의 역량 및 유연근무 확대	C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B
		□ 연구기관 보안관리 체계의 우수성	B
	2-2-2. 노사관계 선진화	□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B
	2-2-3.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S
2-3. 보수 및 예산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B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A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S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E
		□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	S
2-4. 감사 및 평가 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등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B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A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S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S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A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A

총 평

□ 평가항목별 평균 대비 기관 득점 수준



□ 종합의견

[연구분야]

○ 대부분의 보고서가 주제에 따라 정책 현안 파악, 전문가 의견 수렴 또는 설문조사, 해외사례 분석, 정량적 자료 분석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보고서의 경우에는 본문 내 분석 내용과 결론 도출의 유기적 상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책임지원체제를 마련하여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또한, 연구원의 고유임무에 매우 적합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여 관련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통신정책 관련 정책대안들을 대체로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법·제도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며 국가정책이나 사업에도 반영하고 그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내외부 수요를 반영한 발굴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계적임. 다만 수시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석이 저조함.

○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정책기여 확대, 연구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협동연구를 수행한 것이 돋보임.

○ 협동연구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형과제 위주로 추진하여 협동연구 본연의 취지에 부합함.

○ 현황 점검, 관련규정 검토, 직원 교육 등의 단계로 지식자산 관리 체계와 절차를 가시적으로 운영하고 단계별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가시성도 높음.

○ 국제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Plan-Do-Check-Act에 따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이행점검, 결과평가, 공유 및 환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현재 제출된 단기 전략목표는 적실하고 우수하나, 연구역량 국제화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장기비전과 실천전략의 확립이 요구됨.

[경영분야]

○ 기관장은 산업현장중심의 과제를 개발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현장중심의 소통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현장성을 중시한 활동이 돋보임. 또한 ICT 통계 구축에 의한 연구자산을 축적함으로써 기관의 미래 핵심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기관내 다양한 의사소통통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였음.

○ 미래지향적 과제의 주제가 일반적 인식 수준에 그쳐, 미래 산업을 선도할 비전 강화와 구체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기관장의 대외활동에 있어서 행사성보다 기관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매체의 활용도도 높일 필요가 있음. 경영윤리확보를 위한 직원 교육의 확대와, 구성원들의 연구윤리의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제도 운영도 요망됨.

○ 5년간의 공백 후에 차별화된 ICT 산업연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통계센터 중심으로 미디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온 점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상의 부족으로 신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에 대하여 대처하는 계획이 다소 미흡함.

○ 선진국 또는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사업의 확충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개도국 ICT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이행은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ICT관련 자료의 컨트롤타워로써 ICT 통계 기획 및 자료생산, 전파 기능 활성화 과제는 매우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 KIRD 집체교육 참여 의무화, e-러닝 ASP 서비스 도입, 모바일 서비스 추진 등을 통해 직군별, 교육과정별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사설교육기관 교육비 대비 약 75% 수준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긍정적이나, 채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채용절차 시행 시 외부평가위원의 참여 비율을 낮게 배정하는 등 실제 노력은 미약한 편이며, 이의신청 접수를 시스템화 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체제 마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나, 협의회를 대체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 쟁점을 해결하고 있음. 노무담당자 교육참여가 활발하고, 노무담당부서장과 노조간부가 공동으로 노무교육에 참여하는 특징적 장점이 있음. 노조가입율이 39.5%임에도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고충처리시스템도 갖추어야 함.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는 전년도 완료된 상태로, 단체협약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준수하고 있으며, 퇴직가산금 및 장의비 지급제도의 폐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의 신설, 단체상해보험을 선택적 복지와 통합,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 개선, 포상지침 일부개정(제3조)을 통한 특별포상대상자 제한, 등이 원만히 해결되었음. 휴가일수 조정 등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또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 전체적 방만경영 위반 여부에 대한 일상감사가 행해지고, 전자결제를 통해 50만원 이상 지출 시 자동 통제가 이루어짐(모니터링 상시화).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당해연도의 연구방향 및 사업목표 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나, 기본과제와의 차별성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사업비, 수시연구비 등 연구사업비 및 연구개발적립금의 편성 및 집행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률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임.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제 규정의 준수 및 개정 또는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노력을 하였으나 향후 정보공개,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본연봉과 기타수당의 구성비율 및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기본연봉이 누적식이 아니며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율 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이의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노사협의를 수차례 걸쳐 구성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적용대상, 임금 조정기간 및 신규 채용재원 등 제도설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짐.

○ 채용과정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면접위원 선정단 풀을 운영하는 등 개선성과가 있으나, 개선실적(연구과제 선정 회의 시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 증가)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선된 결과물을 정밀하게 규정화, 내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청년인턴의 채용계획 대비 채용실적이나 인턴운영 적정성, 국가유공자 채용노력과 채용실적 등은 모두 정부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각종 휴가제도들의 활용을 위한 내부규정화나 그 사용실적 등도 전반적으로 우수하지만, 장애인 채용노력이 주로 채용 후의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에 치우친 감이 있으며, 일부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아직 내부규정화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연봉 및 수당에서의 격차는 해소되었으나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방법에서의 격차해소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전환목표를 달성하였지만, 비정규직이 30%를 초과하는 구조임에도 격차해소, 고용안정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없이 연도별로 상황에 맞추어 전환을 시행하고 있어 연속적, 체계적이지 못함.

I 연구 분야

1-1 연구보고서

1-1-1. 연구보고서 우수성

□ 기본/수시/일반/수탁과제 등의 연구보고서 우수성

〈장 점〉

○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단면조사였던 것에 비해 여러 기업의 생애주기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분석과 정책 연구에 있어서 실증적 분석 토대를 마련함.

○ 기존 정책 연구가 법과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데에 집중해 왔음에 비해 정보 제공 주체인 개인의 인식과 활용 주체인 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 대안 제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함.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적 고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 연구들이 기술적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이를테면 주파수 공동 사용 연구의 경우처럼 경제적 측면을 보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높임.

○ 문화 상품의 해외 진출 전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사회 정책과 글로벌 정책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

〈단 점〉

○ 일부 보고서에서는 전문가와 해당 산업 종사자 대상 면담에만 집중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에 의한 객관적 연구 결과의 보완적 기능이 미흡함.

○ 전반적으로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이 체계적이지만 상당수는 장(章)별 독립적인 연구 내용과 논리가 전체적으로 연결되고 종합되는 부분이 미흡함.

○ 일부 보고서는 정책 방안들의 구체성이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유효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융합하여 대안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문가 면담조사와 분석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질문 문항 구성에 대한 사전 설계와 연구가 미진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최종 결론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단계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로드맵, 국내 적용 가능 기관 예시 등 보다 전략적 판단과 선택에 의한 정책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 조사 분석 결과에 근거한 또는 시사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적 창의성 발휘가 필요함.

○ 일부 보고서의 경우 보다 치밀한 논리 구성과 연구 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구의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술 방식과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세심한 보완이 필요함.

1-2 국가정책 지원 성과

1-2-1. 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지원 성과

ㅁ 국정과제 수행 연구 · 사업 실적과 성과

〈장 점〉

○ 과제 발굴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략 간담회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지원체제를 마련하여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현안과제에 대한 예측 및 수요 요구에 대한 분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안 대응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 있음.

○ 연구반 및 전담반 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정부부처 국정과제에 대해 참여 및 지원을 하고 있음.

○ 연구기관의 고유 임무에 매우 적합한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및 정책수립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ICT 규제개혁 기반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고 있는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례 분석을 전담하여 매뉴얼을 타 연구원에 앞서서 제시함.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의 효과를 거둠.

○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부담경감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이동통신사 허가정

책 수립을 지원하여 단통법 개선안을 마련하여 월평균 통신비 3.4% 감소 효과를 유발함.

〈단 점〉

○ 국정과제 및 과제에 따른 추진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나 시스템이 다소 부족함.

○ 국정과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은 명확하지만, 이러한 기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만한 차별성 있는 실적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 국정과제 참여 및 지원 실적이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치중되어 있음.

○ 우정사업 관련 연구들은 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국정과제의 추진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자문위원회에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이에 따른 과제 선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선정→국정과제 연계와 같은 구조보다는 국정과제 분석→연구과제 분석의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관의 고유 임무와 직접적 관련성은 다소 떨어지나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 기반연구와 관련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다양한 관점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총사업비와 관련하여 재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38%) 26개 산하기관 중 수탁과제 비율이 가장 높아 고유사업, 중장기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연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대응 정도

〈장 점〉

○ 미래창조과학부와의 ICT 미래전략 간담회 활성화와 현장중심 소통 활성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 긴급 및 수시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능정보사회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요청에 전담반 설치 및 협의체 제를 가동하였고, 지능정보 기술을 K-ICT의 추가 진흥분야로 채택을 하는 성과를 얻음.

○ 다양한 선제적 대응실적이 제시되었고, 그 성과도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계획 속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성장정체, 잠재성장율 하락 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터넷 융합 활성화 방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터넷 융합활성화 계획을 보고하여 ICT 융합통계관리 계획(안) 마련을 지원한 실적이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한·중FTA에 대비한 콘텐츠경쟁력 제고, 외주제작 및 스포츠중계권 거래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의뢰받아 스포츠 중계권거래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금지행위 세부기준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협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안)'을 발제하는데 기여한 실적이 있음.

〈단 점〉
○ 정부부처의 긴급 및 수시요청 요구가 주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한정되어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함.
○ 제시된 대응 실적과 성과 가운데 일부는 현안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 기선정된 연구과제에 접목한 연구·사업의 결과로 제시된 것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연구 주제 발굴을 독려하기 위한 내부 제도 수립이 필요함.
○ 연구원의 역할 및 보유 역량에 대하여 적극적 홍보를 하여 다양한 부처의 수요 요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네트워크 운영 실적과 성과

〈장 점〉
○ 연구반 및 전담반 제도를 두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정부 및 국회 등과 다양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관련 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 인문사회 분야와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ICT 혁신 전략 수립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및 공유 여건을 마련함.
○ ICT와 문화의 결합을 위해 ICT인문사회 연구 포럼을 운영하는 등 창조경제의 혁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디어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융합연구를 장려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함.
○ 국제적으로는 카자흐스탄 정책자문, 캄보디아 정책자문, 벨라루스 정책자문, 아르헨티나 정책자문 등의 실적이 있음.

〈단 점〉
○ 정책연구협의회를 상반기에 한 번만 실시하여 정책연구협의회 실적이 다소 미미함.

○ 국회와의 협력관계는 토론회와 간담회 참석, 포럼 발표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협력적 관계 정도가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회와 공동 주최 및 주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입법화 등의 성과를 낼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분야는 소비자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므로, 소비자들의 의견 및 패턴 분석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창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책연구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타 연구기관들과 ICT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연구를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1-2-2.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지원 성과

ㅁ 연구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정보통신정책 관련 이슈들은 태반이 규제를 수반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하지만, 대체로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됨.
○ 정책 대안들이 대체로 법제도정책의 제·개정에 반영되거나 지원한 실적이 있음.
○ 정책의 파급효과를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기술하고 각각의 효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함.

〈단 점〉

○ 관계 부처, 시민단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강화하고, 반대론자를 설득하고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노력이 다소 미흡함.
○ 연구과제 일부는 제시한 대안이 정책화 과정이나 정책화 실적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경우가 있음.
○ 제시된 정책 대안의 사후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요구되고, 필요 시 후속과제를 통해

그 사후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제시한 정책 대안이 정책화 과정이나 정책화 실적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대안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그 사후효과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선도과제의 정책수립 기여도

〈장　점〉

○ 대체로 선도과제의 발굴이나 선정이 체계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하여, 그 연구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선도과제의 대부분이 관련 법제도정책의 제·개정에 반영되고 나아가 국가정책이나 사업에도 반영된 흔적이 있음.

○ 대체로 새로운 지식이나 정책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회·문화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각각의 효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음.

〈단　점〉

○ 일부 선도과제는 연구주제의 참신성이나 정책대안 제시의 선제성 면에서 글로벌 선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진부한 실정임.

○ 정책대안의 제시가 매우 한정적인 선도과제가 있는 바, 보다 폭넓게 전문가, 시민 단체,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지식을 확립하기 위한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있으나 국내외 논문 게재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개선 및 건의사항〉

○ 연구주제의 참신성이나 정책대안 제시가 글로벌 선도성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보다 폭넓게 전문가, 시민 단체,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2-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정부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기본연구 점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수탁연구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함. 상세유형별로는 정보제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본연구, 수탁연구 순임.

○ 정부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이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특히, 정보제공이 전체평균 대비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음. 특히 '편리성'이 전체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상세업무 유형에서도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의 모든 차원 및 품질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물'과 '전문적인 연구결과물'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과제에 대한 활동 체계적으로 운영'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고객문의 및 협의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과제에 대한 활동 체계적으로 운영'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정보 및 연구결과물 획득 용이'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의 의견 및 건의사항 경청하고자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 '연구과제 수행' 업무유형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과제의 중간 산출물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중간 단계에서의 고객 의견 수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집된 의견을 연구과제에 반영하여 고객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보다 강화하여 진행해야 함.

□ 산·학·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산·학·연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상승함.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의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위탁/공동연구는 하락함. 상세유형별로는 기본연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탁연구, 육성 및 촉진, 정보제공, 위탁/공동연구 순임.

○ 산·학·연 고객의 전체평균(국무총리 산하 26개 조사기관) 대비 만족도 분석결과, 전체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보제공, 육성 및 촉진의 경우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공동연구는 전체평균과 차이가 없음.

○ 구성모형별 KCSI-EH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요소의 점수가 전체평균 대비

높게 나타남. 특히, '편리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상세업무 유형에서는 위탁/공동연구를 제외한 4개 상세업무의 대부분의 차원 및 요소가 해당업무 전체평균보다 높음.

○ 세부항목별 분석 결과, 기본연구의 경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물', '전문적인 연구결과물' 항목이 높은 반면, '고객의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위해 노력', '고객관계 형성 및 유지 위해 노력'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남. 수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과제에 대한 활동 체계적으로 운영' 항목이 점수가 낮게 나타남. 위탁연구의 경우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책임감 보유' 항목이 높은 반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이 점수가 낮게 나타남. 정보제공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 제공' 항목의 점수가 높은 반면, '고객문의 및 건의사항 전달 위한 담당자 접촉 용이' 항목이 낮은 점수로 나타남. 육성 및 촉진의 경우, '포럼 및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를 해당 분야 전문가 구성', '국가 및 관련 분야에 유익한 포럼, 세미나' 항목이 점수가 높은 반면, '포럼, 세미나 운영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음.

○ 업무유형별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연구과제 수행'과 '정보제공'에서는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함. '육성 및 촉진'에서는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재생산된 자료들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피드백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3 연구관리

1-3-1. 연구과제 선정 및 수행의 적정성

□ 연구과제 발굴/선정의 합리성

〈장 점〉

○ 기본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수요를 반영한 발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인 과정에 근거함.

○ 수시연구과제는 시급한 현안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설립목적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을 우선적인 선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과제 예비선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구사업선정회의에서는 각 실별로 외부전문가 위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외부위원들은 산·학·연 전문가 외에 정부부처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정책반영도를 높이고자 노력함.

〈단　점〉

○ 일반연구과제 발굴은 2건으로 발굴 건수가 적고, 외부의 적극적인 수요조사가 부족함.
○ 수시연구과제는 정부 요청과 내부 제안을 위주로 발굴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부발굴과정이 부족함.
○ 수시연구과제 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석이 저조함.
○ 수시연구과제 선정위원회는 심의과제를 모두 선정하고 있어, 수시연구과제 선정과정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반연구과제의 경우도 포괄적인 수요조사와 적극적인 과제발굴과정을 거쳐 풍부한 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수시과제 발굴을 원내·외부의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과제선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ㅁ 연구과제 수행/관리의 적정성

〈장　점〉

○ 체계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단계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연구자에게 안내하고, 심사의견을 환류하여 개선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시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연구책임자 회의와 자율점검 등을 통하여 내부점검을 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한 정책적인 활용성을 점검하고 있음.
○ 1인 1과제 원칙을 준수하여 수시연구과제 수행과정에 연구책임자의 편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였음.

〈단　점〉

○ 연구과제 발굴 및 선정과정에 외부전문가의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함.
○ 6건의 사업계획변경 과제가 있으며, 특히 연구책임자의 퇴사로 인한 과제중단사례가 존재하여 기관의 과제중단 후속조치 등 보완이 요구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과제중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2. 협동연구 추진 정도

□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체계 및 실적의 우수성

〈장　점〉

○ 현장 중심의 ICT를 활용한 협동연구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협동연구의 과제수 비중(55.0%) 대비 예산 비중(75.8)이 크고, 협동연구의 취지를 잘 살려서 대형과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정책기여 확대, 연구결과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협동연구를 수행한 것이 돋보이며, 평가자료에서 협동연구 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잘 제시하고 있음.

○ 경영목표의 실천과제로 'ICT, 산업정책 등 생태계 참여자들과의 협력활동 강화'를 설정하고, 협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

○ 산 · 학 · 연 및 정부협력 네트워크, 연구협력회의 등에서 제안된 주제를 협동연구과제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등 협력연구 기반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산출함.

○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 연구의 경우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단　점〉

○ 협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산 · 학 · 연 외부 연구진 중에서 연구계의 참여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연구과제 중에서 협동연구과제의 적정 비율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산 · 학 · 연 네트워크 및 협동연구진 구성에서 연구계의 비중을 관리하여 협동연구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1-3-3. 성과확산 체계의 적정성

□ 연구성과 관리/확산체계 및 실적

〈장　점〉

○ 현황 점검, 관련 규정 검토, 직원 교육 등의 단계로 지식자산 관리 체계와 절차를 가

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 단계별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의 가시성도 높음.
- ○ 연구성과 확산의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 이슈페이퍼 배포 시기 및 대상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음.
- ○ 여타 정기 간행물이 배포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음.
- ○ 차세대 방화벽과 논리적 망 분리 1차 사업을 통해 안전한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함.
- ○ 자체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등 이용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함.
- ○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e-Book으로 교보문고, 네이버 등을 통해 팔리고 있음.
- ○ 이슈페이퍼가 매월 균형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적절함.

〈단　점〉

- ○ 정보시스템 구축과 도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다소 미흡함.
- ○ 국내에 비해 해외 확산 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 성과확산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환류 실행과 반영 실적의 가시성이 다소 미흡함.
- ○ 영문 홈페이지, 영문 자료 및 정보 등 성과 해외확산을 위한 수단이 효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면 개도국으로 편중되어 있고 적절성이 다소 미흡함.
- ○ 해킹에 대비한 직원 교육 등이 다소 미흡함.
- ○ 일간지 기고와 방송인터뷰가 4회에 불과하여 실적이 부족함.
- ○ 언론사와의 협력에 의한 기획 기사가 다소 미흡함.
- ○ 영문 KISDI NEWS가 행사 안내 위주로 내용이 단순하며, 조회 수도 부족함.
- ○ 해외 언론출판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이 개도국에 한정된 측면이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 지식 정보 관리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중장기 추진계획에 근거하면서 추진하여 재정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성과확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류실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확산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국·내외에서 해킹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술적인 차단시스템 확충과 해킹대비 모의 훈련 등을 통한 대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 ICT융합이 강조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연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기관장과 연구원들의 일간지 칼럼 기고와 방송 인터뷰 확대 노력이 필요함.
- ○ 정보통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언론사와의 기획기사를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바람.
- ○ 기관의 활동상, 연구결과, 한국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포함한 영문 뉴스레

터를 PDF파일로 제작하여 해외정책고객에게 연 3~4회 발송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의 명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ICT 선진국인 한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G20국가와 개도국의 언론매체에 균형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3.0 추진 성과 정도

〈장 점〉

○ 정부3.0 추진 체계를 연도별로 수립하는 등 체계적 접근을 하고 있음.

○ 사전정보공표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정보 분류도 수요자 편리성을 고려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5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이 우수함.

○ 맞춤형 서비스 도출을 위한 명확한 추진 체제를 마련하고 있음.

○ 기관장이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특강 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함.

○ 전문가 그룹 대상으로 'KISDI Premium Report'를 제공하는 등 중점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 네이버, 삼성경제연구소 등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단 점〉

○ 우수한 추진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나,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실적 부문에서 연구원 자체 혹은 주도 실적이 다소 미흡함.

○ 우수한 추진 체제를 마련하고 일반국민, 전문가 그룹으로 차별적 접근을 하나, 그룹별로 보급형 서비스에서 한 단계 진보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정부3.0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변화 관리 추진 체계에 따라 실행 여부 점검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을 지향하는 정부3.0의 목적에 맞추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추진에 보다 심층적 노력이 필요함.

○ 연초에 기관장 주재로 정부3.0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금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책임관이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대한 절차를 가시화하고 실적을 제시하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음.

□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장　점〉
- ○ 총 논문게재 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나, 상대적으로 국제 학술 비중은 좋은 편임.
- ○ 영문학술지 'As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을 발간 중임.

〈단　점〉
- ○ 기관에서 발행하는 정책지인 '정보통신방송정책'과 '우정정보'의 비중이 약 36%를 차지하여 다소 높은 편임.
- ○ 1인당 논문실적이 0.58건으로 부족함.

〈개선 및 건의사항〉
- ○ 정책지의 논문 심사방식을 등재학술지 방식으로 하는 등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AJIC의 SSCI 등재 노력도 계속 필요함.
- ○ 논문 게재실적이 기관평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강화가 필요함.

1-3-4.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와 성과

〈장　점〉
- ○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연구역량 국제화 비전을 ICT 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설정하고 연구역량 국제화를 위한 전략목표,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 ○ 전략목표별 주요 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실히 설정되어 있어 있음.
- ○ MOU 9건 신규 체결을 통해 OECD, 개도국 정책자문 및 전문가 파견 사업 관련기관, 중국 국가우정국 과학연구회원 등과의 협력을 시작함.
- ○ 국제공동(협동)연구 12과제 수행, 활발한 국제세미나 참여 등 실질적 연구 국제교류가 활성화 됨.
- ○ 국제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Plan-Do-Check-Act에 따른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이행점검, 결과평가, 공유 및 환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단　점〉
- ○ 15년 신규 MOU 9건 외에 기존 MOU가 어떻게 실질적 연구국제교류, 해외공동연구,

국제세미나 등으로 진화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소 미흡함.

○ 국제교류협력이 매우 활발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연구인력교류에 있어서 국내체류형(in-bound형) 인력교류와 비체류형 해외전문가(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활용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제출된 단기 전략목표는 적실하고 우수하나, 연구역량 국제화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장기비전과 실천전략의 확립이 요구됨.

○ 국내체류형(in-bound형) 인력교류와 비체류형 해외전문가(Non-residential Visiting Fellow) 활용을 확대하고, 연구인력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연구)기관 파견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체류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 프로세스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국제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Ⅱ 경영 분야

2-1 리더십 및 책임경영

2-1-1. 리더십

□ 기관의 현안문제 타개 및 연구역량 증진 노력과 성과

〈장 점〉

- ICT 분야의 벤처 육성을 위한 현장성을 강화한 현안을 설정하였음.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였음.
- 개도국 정책자문을 활성화하였음.
-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정부부처의 과단위 주요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산업 현장 중심의 과제를 개발하여 실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정부부처와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조율한 정책개발의 플랫폼을 구축하였음.
-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우수함.
- ICT 통계 구축에 의한 연구자산을 축적함으로써 기관의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우수함.
- 평가에 있어서, 연구책임자의 기여도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책임자 간 수평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한 점이 우수함.

〈단 점〉

- 미래지향적 과제의 주제가 일반적 인식 수준에 그치며, 급변하는 ICT 분야를 선도할 비전이 다소 미흡함.
-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하여, 그 성과에 대한 확인이 미흡함.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긍정적 방향에서의 동기부여 방안이 미흡하며, 안식년 인원도 제한적임.
- 교육훈련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됨.
- 연구보고서 평가에 정책수요자인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여 실질적인 정책 기여

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 건전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 ○ 미래지향적 연구과제의 선정과 정책대안의 제시에 급격성(radicalness)과 적극성(aggresiveness)을 가미할 필요성이 있음.
- ○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경우,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가급적 분명히 설정하여, 그에 따른 성과평가와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역량을 분명히 정의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긍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ICT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공무원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의견을 기술하여야 하는 서면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도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 이 경우에도 서면평가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내·외적 소통 능력

〈장　점〉

- ○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늘 구성원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였고, 노조 관계자와의 수시 면담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였음.
- ○ 석사급 연구원, 위촉 및 인턴 연구원 등 주니어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단　점〉

- ○ 국가정책 참여 및 지원을 위한 원장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세미나, 콘퍼런스, 신년인사회 등 행사성 성격이 강함.
- ○ 기관발전과 홍보를 위한 기관장의 대외활동 실적이 많지 않고 비중 있는 언론매체의 활용도가 낮으며, 특히 기고의 경우 저조한 빈도를 보이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 ICT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 기관장의 언론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책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전국 단위 유력 일간지에 대한 기고 빈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윤리경영

〈장　점〉
- ○ 의견수렴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다수 시행함.
- ○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든 자금운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였음.
- ○ 연구윤리 강화체계를 구축하는 초기에 구성원들의 연구윤리의식을 선제적으로 진단하였음.
- ○ 연구윤리 자체검증 시스템에 윤문 인력을 배치하였음.
- ○ 기관의 청렴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들을 갖추고 있음.
- ○ 연구윤리 성과가 매우 우수함.

〈단　점〉
- ○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성원 대상의 교육이 횟수 및 참여숫자에서 미흡한 수준임.
- ○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의 횟수가 제한적임.
- ○ 구성원들의 교육이 연구윤리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근무수행상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주기적 인식 강화 노력이 미흡함.
- ○ 연구윤리의식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하나, 구성원들의 연구윤리 준수 의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 정부의 지침이나 윤리과정 정책이나 규정 등 주요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주기적으로 윤리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 ○ 연구윤리 자체검증 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대한 통계를 축적·관리하여 구성원들의 연구윤리의식 정도를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2-1-2. 책임경영

□ 연도별 경영목표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장　점〉
- ○ 전체적으로 경영목표와 실천계획의 체계적 연계성이 잘 정리되어 있고, 실천계획들은 기관의 당면 현안과 타개책을 잘 반영하고 있음.

○ 급변하는 ICT 글로벌환경 변화 속에서 4대 당면 현안을 4대 경영목표로, 11개 세부 현안과제를 11개 실천계획으로 연계하여 35개 성과목표를 제시함.
○ 전체적으로 실천과제가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고, 35개 성과목표 단위로 목표 대비 실적이 적절히 달성되었음.
○ 차별화된 ICT 산업연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통계센터 중심으로 미디어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온 점은 전략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단 점〉
○ 예산상의 부족으로 신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강화에 대하여 대처하는 계획이 다소 미흡함.
○ 'ICT 글로벌 협력 및 통상협상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연구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실적이 다소 미흡함.
○ 실천계획의 내용들이 인더스트리4.0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정책적 경쟁을 고려할 때 2~3년 지체된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일부 추진계획의 달성목표 설정치와 추진실적의 관계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예; 정책과제별 정책자문회의 개최 달성목표)

〈개선 및 건의사항〉
○ 예산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우수 인력의 확보와 동기 부여를 위하여 성과중심 평가·보상 시스템의 제도 개선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 공동연구를 위하여 국제기구에의 장기파견 등을 포함하는 연구역량의 향상과 관련된 실천과제의 보완이 필요함.
○ 성과목표 및 달성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국 또는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사업의 확충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달성목표 대비 실적 보고를 보다 엄밀한 측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함.

□ 책임경영 이행 정도

〈장 점〉
○ 정관개정, 국제화, 평가제도 개선 등에서 일정한 실적을 확인함.
○ 경영목표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서 연구회와의 협조·협력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됨.

〈단　점〉

○ 국제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회와의 협조·협력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국제공동연구 및 협동연구사업 추진과정에서 연구회와 협조·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

2-1-3. 자율지표

□ 기관고유사업 수행과제

〈장　점〉

○ '개도국 ICT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이행'은 IC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입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책자문, 전문가파견, 개발협력연구조사 관련 과거 전문성, 그리고 이러한 개도국사업을 통한 또 다른 사업화(예를 들어, 보안의 경우 국내 보안업체 협력사업 공동 참여) 등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이 강조되는 글로벌 시대에, 본원의 핵심역량부문과 개도국의 개발협력을 연계하였다는 측면에서, 기관의 고유사업으로서 '개도국 ICT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이행'을 설정한 것은 적절함.

○ 미래창조과학부, KOICA 등 관계자가 참여한 국가선정위원회에서 자문대상국을 선정하고, 자문의향서 및 수락서 교환 등 사업수행절차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자문활동의 국내외 파급효과로 피협력국의 ICT 정책 채택, 피협력국(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으로의 한국 ICT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 긍정적인 실적이 인정됨.

〈단　점〉

○ 주로 2015년 내용만 기술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대비 실적을 제시하여 개도국 개발협력의 증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 ICT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이행 과제의 선정에 있어, 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기관고유사업 과제 선정 시 기관장의 강력한 주도나 지난 연도 사업의 관행적 추진보다는 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상호작용 과정이 원활해지도록 증진시킬 것을

권고함.

○ 자문결과가 협력국 정책이행계획에 반영됨을 최종 성과로 간주하지 말고, 피협력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장 중점 추진과제

〈장 점〉

○ 다른 분야와는 달리 ICT 분야는 너무 많은 통계청 승인·비승인 통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기준의 변화에 따라 연속성이 단절된 자료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ICT 관련 자료의 컨트롤타워로서 ICT 통계 기획 및 자료생산, 전파 기능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ICT산업 동향분석 및 융합 분야 통계조사기능의 강화라는 본원의 핵심경쟁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ICT 통계 기획 및 자료생산, 전파 기능 활성화'라는 과제의 설정은 적절함.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통계 45개, 방송통신위 관련 통계 3개 부문의 통계품질 제고, 통계자료 간 중복, 불일치 해소 등 정책개발에 꼭 필요한 데이터의 기획 및 생산·전파 등 관련 과제 수행이 적절함.

○ ICT 통계분석센터 12명의 인력이 수행하던 것을 ICT 통계분석실로 재편하여 2배로 인력을 증원하는 등 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투입 정도, 계획수립 및 환류체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등 방송 분야에 집중된 통계생산과 전파를 정보 분야와 통신 분야에도 더욱 확충할 것을 권고함.

○ ICT 컨트롤타워 구축은 차별화된 중요한 요소이나 일부 다른 지표와의 중복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면 보다 명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2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2-2-1.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 효율적 조직운영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장 점〉

○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연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련 TF 등 조직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3.0 정보공개 등의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함.

○ KISDI STAT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방송통신 관련 통계 기초자료 확보 등 통계 및 동향분석 기능을 강화함.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박사급 연구인력의 비율을 높여 연구의 질을 높이는 등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함.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단 점〉

○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및 운영 실적이 주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고객층의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음.

○ 채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채용절차 시행 시 외부평가위원의 참여 비율을 낮게 배정하는 등 실제 노력은 미약한 편임.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바탕을 둔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이 일어나는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용되지 못함.

○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 등의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통한 우수인력 모집 노력이 미약함.

○ 2015년도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신규 충원 인력 중에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고객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내·외부 고객요구조사 관련 규정, 매뉴얼 및 기타 수단을 마련하고,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대상도 산·학·연 및 대국민의 요구사항 수렴을 강화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 채용의 객관성 관련 내부규정에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부위원 참여 등의 부분을 강화하여 채용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바탕을 둔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력운용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존 우수인력의 사기진작 및 이탈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연구연가 수혜자 비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우수인재 확보 및 이탈방지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구성원의 역량 및 유연근무 확대

〈장 점〉
○ 중장기 교육훈련 방향에 기초하여 2015년 교육훈련계획을 보완·수립하여 시행하였음.
○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출연연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입-재직-승진-보직-은퇴'에 따른 전 생애주기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로연수제를 도입하였음.
○ KISDI 역량강화 TF운영을 통해 교육성과 측정 및 정량지표 개발, 자발적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스템화를 추진하였음.
○ KIRD 집체교육 참여 의무화, e-러닝 ASP 서비스 도입, 모바일 서비스 추진 등을 통해 직군별, 교육과정별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사설교육기관 교육비 대비 약 75%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였음.
○ 우수인력 육성 차원에서 근무교육자(학위취득자)의 추가 선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세미나 교육 참여의 증가 등으로 교육훈련비 전년 대비 72.4% 정도 대폭 증가함.
○ 시차출퇴근제 제도 정착을 위해 시범실시('14.8～'15.1)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3월 '유연근무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활용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에서 수요하는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추진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음.

〈단 점〉
○ 정립된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교육성과지표, 환류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시행된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연구원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과의 연관관계의 체계성과 기관 주도형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비중이 낮음.

○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인재상 관련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에 대한 제시와 성과측정 노력이 미흡함.
○ 연구직에 대해서는 교육실적이 개인성과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 스마트워크 근무제 이외에 선택가능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유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유연근무제 근태불량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관리수단으로써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기록을 확보하여 복무점검하는 것만 시행되고 있음.
○ 유연근무제 근태불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유연근무제 시행지침이나 복무규정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을 직전연도에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기관의 비전,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구성원별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
○ 교육훈련비 배분과 집행이 기관이 지향하는 구성원의 역량강화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환류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인재상과 관련된 핵심역량 중심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권고함.
○ 지원직 이외에 연구직의 교육실적 및 성과가 평가·보상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비 총액과 1인당 교육훈련비 금액을 단순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금액변동의 원인을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할 것을 권고함.
○ 타 기관을 벤치마크하여 다양한 유연근무제 유형을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여 구성원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일반 근무평정과 유연근무제 근무평정이 낮은 직원에게는 유연근무제 혜택에 일정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정을 도입하여 근태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유연근무제 관련 다양한 자율근태관리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유연근무제는 구성원의 자율성이 확대된 근무제도이므로 더 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복무규정에 유연근무제 근무불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함.

□ 인사고과 및 업적평가시스템 이행 정도

〈장　점〉
○ 연구직과 비연구직 직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요소를 구성하고 해당요소에 대한 비중을 달리하고 있음. 또한 계량화 정도가 매우 높음.

○ 업적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평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음. 연구직과 비연구직 직원과 간담회, 의견수렴, 외부 노무사 전문가 의견청취, 우수기관 벤치마킹, 설문 등 각종활동을 하고 있음.
○ 학술지 게재 인센티브제도는 평가뿐만 아니라 승진에도 활용하고 있음. 학술지 게재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올해 47건의 논문이 발간되어 인센티브제도가 작동하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관리팀에서 TF를 운영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관리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 특히, 역량평가 비중을 30%로 높이고, 이 중 15%를 수평평가하고 있음.
○ 실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편차를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을 받아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음.
○ 이의신청 이전에 피드백을 주고 받아 평가결과에 대해 사전적인 이해를 높이고, 이의신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평정제외자 적용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보직자들도 평가를 받도록 함.
○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성과연봉과 능률성과급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결과와 금전적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 평가결과를 재임용에도 활용하고 있음. 정규직의 재임용 거부사유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계약연장 혹은 축소 의사결정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규가 마련되어 있음.
○ 비금전적 보상 중 원내포상뿐만 아니라 원외포상에 대한 추천선정에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있음.
○ 승진과 관련하여 학술지 수준여부를 심의하여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단　점〉
○ 평가의 공정성 개선이 주로 연구책임자 위주로만 진행되었음.
○ 비금전적 보상 중 원내포상이 8인으로 전체 구성원 대비 그 비중이 낮아 평가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다소 낮음.
○ 연구위원 이상 승진 심사 시 원내 심사에 그치고 있어 자격기준(국제적 수준, 독창적 연구논문)과 다소 불일치하고 있음.
○ 부연구위원 승진 시에만 양적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양적기준이 내규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평가의 공정성 부분을 보다 많은 직종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접수를 전산화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도 마련을 건의함.

○ 원내포상을 구성원 대비 약 10%정도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연구위원 이상 승진 심사 시 최소 1인 이상의 외부 심사자를 선정하여 현행 승진 자격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함.
○ 연구위원 이상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정정도의 양적 기준을 마련하여 부연구위원 승진자격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2-2. 노사관계 선진화

ㅁ 노사관계 선진화 정도

〈장 점〉
○ 임금피크제 도입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합의함.
○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나, 협의회를 대체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 쟁점을 해결함(유연근무제도, 평가제도, 임금협상, 임금피크제 등).
○ 노무담당자 교육참여가 활발하고(17회), 노무교육 및 노무자문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노무담당부서장과 노조간부가 공동으로 노무교육에 참여하는 특징적 장점이 있음.
○ 이웃돕기, 지역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구성원의 유대감 및 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함.
○ 단체협약체결을 통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 법정근로시간 면제기준을 준수함.

〈단 점〉
○ 노조 측의 불참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무국장이 원내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 노조가입률이 39.5%(58/147)임에도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음.
○ 수시소통창구가 개설되어 있으나, 수평적 소통채널이 미흡함.

〈개선 및 건의사항〉
○ 노사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고충처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소통채널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2-3. 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장 점〉

○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는 2014년도 완료된 상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음.

○ 퇴직가산금 및 장의비 지급제도의 폐지,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의 신설, 단체상해보험을 선택적 복지와 통합,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기념품 개선, 휴가일수 조정 등,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음.

○ 단체협약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준수함.

○ 방만경영 위반 여부에 대한 일상감사가 행해지고, 전자결제를 통해 50만원 이상 지출 시 자동 통제가 이루어짐(모니터링 상시화).

○ 포상지침 일부개정(제3조)을 통해 특별포상 대상자는 제한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모니터링 결과를 상시 점검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함.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실적 정도

〈장 점〉

○ 복무/인사 관련 방만경영 정상화가 2014년도 완료된 상태로 기준 준수가 잘 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

○ 단체협약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준수함.

○ 복무요령 일부개정(제22조),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준수함.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모니터링 결과를 상시 점검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함.

2-3 보수 및 예산 관리

2-3-1. 예산운용의 적정성

ㅁ 전략적 연구사업비 운용

〈장 점〉

- 중점연구과제는 연구사업관리 규정의 절차에 의해 발굴된 사업 중 기관의 설립목적 및 정부의 시책에 가장 부합하는 과제를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음.
- 과제확정단계에서는 당해연도 연구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사회적·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음.
- 2015년도 중점연구과제의 계획대비 예산집행은 90.8%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2016년도 중점연구과제는 3개로, 이 중 연차연구과제는 2개를 선정하였음.
- 연차별 중점연구과제는 협동연구로서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전문성 활용 등이 요구되는 과제임. 동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음.

〈단 점〉

- 제시되어 있는 중기예산 배정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중점과제에 대해 우선배정원칙 외에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중점과제의 연차별 소요예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예산배정 시 사업규모 및 범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연차별 과제의 소요예산을 동일하게 산정한 이유는 2016년도 연구성과에 따라 향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예산을 배정할 때 사업규모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중장기예산배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중점연구과제의 연차별 예산배정 시 개괄적으로라도 사업규모 및 내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장　점〉

○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연구사업비 대비 정부부처 제안과제 사업비 기준 및 기초연구비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음.

○ 전체사업비 중 정부부처 제안과제 비율이 49.1%(2014년), 50%(2015년) 등으로 연구회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

○ 기초연구과제 비율은 24.9%(2015년), 26.8%(2016년)이며, 수시과제비율은 12.9%로 모두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연구사업비를 편성하였음.

○ 2015년 연구사업비 예산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4.7%이며, 각 사업유형별로는 기본연구과제 90.9%, 일반연구과제 96.1%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수시연구사업비의 기관전용이 없으며, 외부위탁비율도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내역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음.

○ 전체 집행률도 91.7%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두드러진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예산집행에 대한 4단계 검토체제(기획전략팀, 감사심사국, 재무회계팀, 감사심사국)를 설정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이와 병행하여 그간 연구원의 예산편성지침과 연구회의 기준 간에 명칭, 순서 등이 다른 부분을 연구회의 지침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단　점〉

○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률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지만 수시과제 사업비의 경우 75.7%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향후 정보공개, 교육훈련, 시스템구축 등 여러 분야별로 여러 국책연구기관과의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개선노력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수시과제의 특성상 예산집행률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의 예산집행률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분기별로 실시되는 집행률 점검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3-2. 보수체계의 적정성

ㅁ 총인건비 관리 및 결산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장　점〉
- ○ 총인건비 규모는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 ○ 2014년 대비 2015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 인상률 기준(3.8%)을 준수함.
- ○ 결원인건비는 연구회 평가기준에 따라 적절히 계상하였음.
- ○ 능률성과급 재원이 되는 결산잉여금(645백만원)은 기관 고유목적사업(연구개발적립금) 및 능률성과급으로 배분하여 적정하게 처분되었음.
- ○ 퇴직급여충당금 편성·집행은 연구회 평가기준을 준수함.

〈단　점〉
-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 기본연봉과 기타수당이 총 연봉의 69.2%로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근속연수와 연동된 자동승급 등 기본연봉의 자동적인 인상효과를 갖는 수당은 없음.
- ○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수당은 성과연봉으로 전환하였음.
- ○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은 간부직 ±27%, 비간부직 ±16%이며,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의 경우도 간부, 비간부 모두 2배 이상의 차등지급을 하고 있음.

〈단　점〉
- ○ 기본연봉은 누적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 및 인원배분율도 실시하고 있지 않음.
- ○ 성과연봉의 인원배분 시 최고등급 배분비율이 최저등급에 비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A등급과 C등급 간에도 나타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기본연봉을 누적식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기본연봉의 차등지급률과 인원배분비율 또한 평가기준 준수가 필요함.

○ 성과연봉과 결산잉여금에 의한 능률성과급 인원배분 시 B등급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룰 수 있도록 인원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절성

〈장 점〉

○ 임금피크제는 2015년 10월 13일에 노사 및 직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동년 12월 29일에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였음.

○ 2015년 9월 2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제도 및 인력운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사대표 협의, 노사실무 협의, 부서장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원이며, 임금조정기간은 정년직전 2년 그리고 정년 2년 전에는 총연봉의 90%, 1년 전에는 80%의 지급률로 구성되어 있음.

○ 신규채용자에 대한 재원조달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절감분, 퇴직자와 신규채용자의 임금차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을 준수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4 감사 및 평가결과 개선 정도

2-4-1. 국회 지적사항 및 연구기관 평가결과 개선 정도

□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정도

〈장 점〉

○ 외부 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많았으나 1건을 제외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함.

○ 감사 모니터링 조직이 직원 대비 적정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일상 감사 대상을 세분화, 정형화하여 모니터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논문 게재 실적이 전년 대비 11% 증가됨.
○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과 관련하여 평가관리팀을 운영하여 2차적으로 점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여 2년 연속하여 연구보고서 윤리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얻음.
○ 선진국 및 OECD 등과의 공동연구 증가 실적이 있음.
○ 채용과정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면접위원 선정단 풀을 운영하는 등 개선성과가 있음.
○ 평가 TF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개선실적을 도출함.
○ 자체 감사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는 합리적임.
○ 상하간 의사소통 채널을 정례적으로 가동한 부분(주니어보드 운영, 열린대화 등)은 긍정적임.

〈단　점〉
○ 장기근속자 포상지급 규정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교육 실적이 부족함.
○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지급률, 인원배분비율에 대한 개선실적이 여전히 미흡함.
○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시 지적된 장기근속자 포상지급 규정 폐지에 대한 조속한 노사협의가 필요하고 연구용역관리 부적정(보증보험 증권제출을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 개정) 관련 지적사항 등 국무조정실의 연구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항(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679 2016.03.22.)이 있음.
○ 시행 내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규화가 필요함.
○ 내부 우수인력 유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개선 및 건의사항〉
○ 장기 근속자 포상지급 규정에 대한 개선 실적이 필요함.
○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교육 활동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개선실적(연구과제 선정 회의 시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 증가)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선된 결과물을 정밀하게 규정화, 내규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기본연봉 누적식, 차등지급률, 인원배분비율에 대한 개선작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무조정실의 연구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사항(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679 2016.03.22.)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이 요구됨.

2-5 사회적 배려

2-5-1.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장애인 고용실적이 연 평균 4명으로 상시근로자 수 대비 3.0%를 충족하였으며, 이러한 고용실적 유지상태가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 장애인 채용 시 우대사항을 채용공고 시에 명문화하고 있으며, 서류 및 면접전형 시 총점의 5%를 가산하는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연계고용을 위한 실적도 존재함.

〈단 점〉

○ 장애인채용노력으로 기술된 내용들이 채용확대를 위한 노력들이기보다는 채용 후 근무환경 개선, 차별금지, 계속근무기회 제공 등과 관련된 것들이며, 채용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노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현재 고용된 장애인력이 정규직 인원들이어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퇴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애인 추가고용의 필요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판단되지만, 국가정책 이행의 차원에서 신규채용을 위한 직접적 노력들이 보다 내실 있게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월간 상시근로자 수 변동 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 채용 이행 정도

〈장 점〉

○ 기간 중 청년인턴 신규채용계획 3명(전년도 계속근무자 9명 제외) 대비 6명(연구인턴 4명, 행정인턴 2명)을 채용하여 200%의 채용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결원 발생에 따른 1개월 이내 결원보충 노력도 우수함.

○ 청년인턴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오리엔테이션, 근태관리, 업무평가, 고충처리담당제도 등 근무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음.

○ 청년인턴들에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취업교육 등에 예산지원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취업지원을 위해, 타기관 채용전형, 채용박람회 참여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수인턴 3명에 대해 계약직 연구원으로 계속근무 기회를 제공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준수 정도

〈장　점〉
○ 기관 총원 128명 대비 8명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 고용률 6%를 달성함으로써, 정부 기준을 충족하였음.
○ 기간 중 신규채용 인원 1명의 실적이 있음.
○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관련 제도를 내부규정(인사관리요령 제8조)에 명문화하였으며, 서류 및 면접전형 단계에서 각각 만점의 5%, 10% 가점부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국가보훈처취업정보시스템에 채용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구인을 위한 관할지청 담당자와의 긴밀한 면담을 통해 1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단　점〉
○ 해당사항 없음.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휴가장려 및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운영의 적정성

〈장　점〉
○ 휴가장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휴가사용촉진 관련 제도를 단체협약에 의해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그 절차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 노력을 기울였음. 이러한 노력의 결과 휴가 소진율 90.6%라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음.

○ 출산전후휴가제도(복무요령 제21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복무요령 제22조) 등을 통하여 해당 제도들을 내부 규정 속에 명문화하였으며, 연구원 내 그룹웨어를 통해 관련사항의 공지 및 안내 등 관리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출산휴가 3명, 배우자출산휴가 7명의 사용실적을 달성하였음.
○ 내부규정을 통해 육아휴직제 제도(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단체협약 제87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단체협약 제88조) 등의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룹웨어에 관련 규정들을 게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용기간 설정방법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기울임.
○ 복무규정 제21조 속에 태아검진시간 청구, 여성보건휴가 등의 제도를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음.

〈단 점〉
○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일부 제도들이 아직 내부 규정화가 되어 있지 않음.
○ 관련 제도들의 사용실적이 미진함.

〈개선 및 건의사항〉
○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내부규정 속에 명문화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해당 제도들 중 가족돌봄휴직과 임신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아직 내부규정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고,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국가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에 관한 내부 규정화가 조속히 필요함.
○ 해당 제도들에 대한 다양한 관리 노력을 통해 활발한 사용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됨.

2-5-2. 비정규직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정도

〈장 점〉
○ 인사관리요령, 별정직 관리요령에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관련 조항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음.
○ 급여(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 복리후생성 제 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시행하고 있음.

○ 비정규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환과 격차 해소의 기본 방향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환 목표를 이행하려는 기관의 노력이 보임.
○ 기획재정부 전환승인 목표인원을 차질없이 전환함.

〈단　점〉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에 위촉사무보조원의 직군을 규정하고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능률성과급 지급기준, 지급방법에서도 차별적인 조항, 조치들이 존재함(과제기여도, 근속년수를 기준).
○ 30%를 초과하는 비정규인력 구조임에도 격차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중기 기본계획 없이 연도별 실행방안을 준비·시행하고 있음.

〈개선 및 건의사항〉
○ 능률성과급 지급 시 차별해소는 전년도에도 개선 건의사항이므로 개선을 위한 기관의 의지·노력이 필요함.
○ 평가보고서 자료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일관성 있도록 작성·제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태도는 개선이 요청됨.